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9
2023/1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영길 | **감수** 목진용, 남정호 | **담당** 김 민 Email: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 · 해양법 연구실(051-797-4798)

Contents

국제기구

국제해저기구(ISA) ····· 2
ISA, 심해저 광물 개발 향방을 결정할 2023년 ISA 광물규정 협상

지역별 동향

아시아 ····· 6
중국 중국·필리핀 정상, 남중국해 석유·가스 공동탐사 언급
중국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가스전 개발 선포... 중국, 대형 해경함 파견
중국 중국,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일본 선박 구축
일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개최
일본 2023년도 방위관계예산 구체화
필리핀 아융인에 대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북아메리카 ····· 25
미국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 워크숍 첫개최

유럽 ····· 27
노르웨이 노르웨이, 최다 북극 석유가스 탐사 라이센스 계약 개최

호주 ····· 30
호주 제2차 호주-프랑스 외교·국방장관 회의

중동 ····· 34
리비아 리비아 법원, 튀르키예와의 탄화수소 자원 탐사 합의 무효 판결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 37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저기구
ISA

전문연구원 민영훈

심해저 광물 개발 향방을 결정할 2023년 ISA 광물규정 협상

올해 발표될 ISA의 규제들이 심해 광물 자원 개발의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재료 등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심해저 광물에 대한 개발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에 대한 관행과 개발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향방은 올해 ISA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 예정인 ISA 개발규칙(Exploitation Regulation)에 달려있다. 심해저 광물 개발 규칙 협상을 위한 ISA

심해저 광물(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등)은 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이러한 심해저 광물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상정하고 국가관할권 한계 이원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와 그에 부존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을 ISA를 통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ISA는 현재까지 탐사규칙을 개발 및 채택하여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과 광구 계약을 체결하고 탐사를 승인하고 있다. 반면, 광물의 본격적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심해저 해양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의 부족으로 개발규칙의 채택에 ISA협상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그림 1. 망간단괴 및 채광기(The Metal Company, TMC 소유)





그림 출처: The Guardian(2023), Leyland Cecco, 2023년 2월 6일, Leaked video fottage of ocean pollution shines light on deep-sea mining

국제해저기구
ISA

ISA는 올해 3월 법률기술위원회와 이사회를 시작으로 6월~7월 이사회 및 총회, 10월 이사회까지 연속적으로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ISA 광물 개발규칙은 ISA 법률기술위원회에서 초안을 2019년 이미 개발 완료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ISA 이사회가 개발규칙을 승인하면 이 개발규칙에 따라 ISA의 계약을 통해 해저 광구를 탐사한 회사들이 개발 계획을 ISA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해저 광물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해저 광구 탐사에 참여한 많은 다국적 기업과 벤처기업들은 ISA의 개발규칙 승인 및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와 환경단체 등은 심해저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여 ISA 개발규칙 승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논의 동향

현재 심해저 광물에 대한 ISA 개발규칙의 승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발 활동에 있어서 재정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은 이 재정조건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심해저기업간에 무차별원칙, 계약자와 ISA 모두에게 공정할 것과, 납부율은 심해저 광업자에게 인위적인 경쟁우위나 경쟁열위를 부과하지 않도록 동일한 광물이나 유사한 광물의 육상 광업에 널리 적용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협정 부속서 제8절). 이 외에도 이행협정은 원론적으로 납부제도 및 특허사용제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들 원칙들의 구체적인 합의가 ISA 개발규칙으로 당사국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개발 활동에 대한 재정조건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해저 탐사 활동을 위한 그리고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재정조건의 이념은 정해져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행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국들간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저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로열티와 관련하여 추출된 금속의 가격 산정 방법, 로열티 적용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없어 명확한 로열티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당사국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ISA 개발규칙의 쟁점은 심해저 개발이 심해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ISA 법률기술위원회에서 개발을 완료한 개발규칙 초안은 개발 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해저 광물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긴급대응 및 계획,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해저 해양환경에 대한 동식물군, 생태학적 균형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부족하고,

국제해저기구
ISA

광물의 채광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와 부유물의 차단에 대한 조치도 명확하지 않아 개발규칙의 현재의 환경조치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ISA는 개발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해양환경 전문가의 평가 또는 자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후 해양환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를 위한, 환경이행보증금, 보험, 환경보상기금 등을 설립하기를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팔라우, 피지, 사모아,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스페인, 독일, 파나마, 칠레 등은 해저채굴 중단 또는 모라토리엄 등을 통해 해저 광물 자원 개발 활동이 명확한 과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해저 광물 탐사광구 현황



그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년 6월 26일, 해수부, 인도양 1만㎢ 규모 광구 독점탐사권 계약(검색일: 2023.2.25.)

ISA 심해저 광물규칙 승인 여건 전망 및 함의

올해 ISA의 심해저 광물규칙의 승인에 관한 여건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이다. 현재 많은 국가들은 핵심 자원 및 기술에 대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등은 IPEF 등을 통해 희귀 광물 등을 협의체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 심해저 광물 개발은 일부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시적 관점에서 ISA 개발규칙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저 광물 개발 활동의 해양환경 오염 문제, 이익의 공정한 분배 등에 관한 실행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들 문제에 대한 국가들 간의 이견차가 극적으로 나뉘고 있어 국가간 이견을

국제해저기구
ISA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현재 ISA 개발규칙 채택의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SA와 3개의 심해저 광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심해저 광구에는 5억6천만톤의 망간단괴가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300만톤 규모의 망간단괴를 채광할 경우 100년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막대한 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불구하고 2021년 삼성 SDI는 심해저 광물채굴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익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냐 또는 해양환경 피해로 인한 후속세대의 권리 침해냐 라는 이해충돌의 갈림길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명확히 파악하고 양극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1]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2023년 2월 24일, Exploration Contracts [2] Pass Blue, 2023년 1월 2일, Opposition Grows Among Countries as Seabed-Mining Efforts Push Ahead [3] The Guardian, 2023년 2월 6일, Leaked video footage of ocean pollution shines light on deep-sea mining [4] The Wall Street Journal, 2023년 1월 5일, Regulations Set to Be Issued This Year Will Determine Course of Deep-Sea Mining [5] 서울신문, 2021년 3월 31일, 삼성SDI, 해저 광물 채굴 금지 이니셔티브 참여 [6] 해양수산부, 2014년 2월 22일, 우리나라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현황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중국·필리핀 정상, 남중국해 석유·가스 공동탐사 언급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1월 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논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양국은 이날 회담 후 「중국-필리핀 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두 정상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시진핑·마르코스 주니어, "석유·가스 개발 협상 재개" 희망

이날 회담에서는 특히 남중국해 석유·가스 공동 개발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양국 정상 모두 공동 개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필리핀과 해양 문제를 처리하고 석유·가스 개발 협상을 재개하여 비분쟁 지역에서 석유·가스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신에너지 자동차 등 녹색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또한 "중국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농업, 인프라 건설, 에너지, 인문, 무역, 투자,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 심화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며 "계속해서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양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중국과 석유·가스 개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림 3.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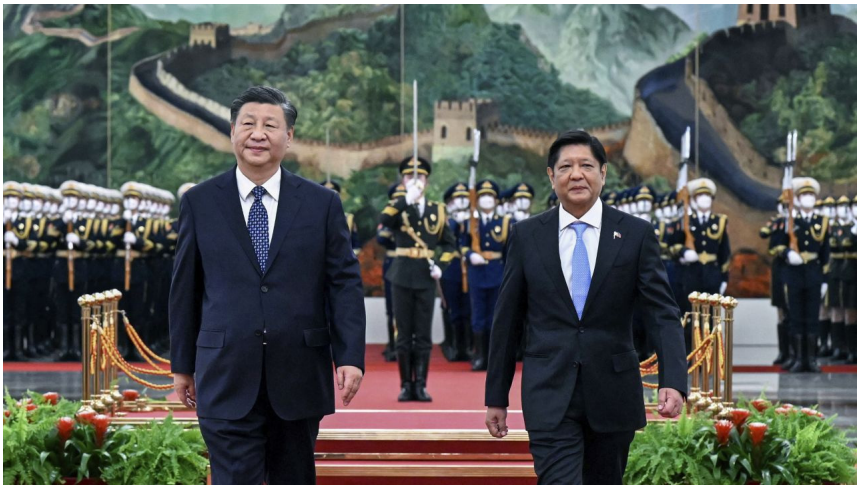


그림 출처: CNN/AP

아시아

중국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는 장기간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긴장을 조성해 온 쟁점이다. 특히 양국은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다오)과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국 간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그림 4.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그림 출처: 연합뉴스

그 시작은 지난 2005년 중국, 필리핀, 베트남 3국의 '남중국해 해양지진 공동 연구' 개발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 공동 과학 조사 활동은 석유 가스 자원의 공동 개발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이후 필리핀에서 친미 성향의 베니그노 아퀴노(Benigno Aquino III) 3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중·필 관계가 악화하고,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 간 공동 개발 협정은 중단되었다. 필리핀은 2014년부터 6년 동안 남중국해 내에서 중국과 석유·가스 공동 탐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아시아

중국

그러다 비교적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취임 후 2018년 양국은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협의를 2019년부터 시작했다. 그는 중국과의 공동 탐사 금지 조치도 2020년 해제했다. 그런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헌법상 제약과 주권 침해를 거론하며 중국과의 공동 탐사 협의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후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 출범 후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과의 새로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선 12월 "필리핀은 중국과의 협상이 없더라도 이 해역에서 석유·가스 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은 11월 필리핀을 방문하고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림 5.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미국 해리스 부통령



그림 출처: NIKKEI Asia

필리핀, "중국과의 합의 없이도 남중국해 석유 탐사할 것"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월 4일 시진핑 주석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남중국해 문제 언급은 주목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 이외에도 "중국은 항상 필리핀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에 두고 전략적이고 전면적인 각도에서 필리핀과의 관계를 본다"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역시 "필리핀과 중국 관계가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회담 후 시진핑 주석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일대일로, 농어업, 기초 인프라, 금융, 세관, 전자상거래, 관광업 등에 관한 협력 문서에 공동 서명했다.

아시아

중국

한편, 2022년 6월 두테르테 후임으로 취임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세안 이외 국가를 공식 방문한 것이다.

출처 : [1] 연합뉴스, 2016년 4월 25일, “中, 연내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매립 개시…전초기지화 착수” [2] SCMP, 2023년 1월 4일, “China offers talks on oil exploration deal with Philippines as presidents Xi Jinping and Ferdinand Marcos meet” [3] CNN, 2023년 1월 5일, “China and Philippines agree to ‘manage differences’ on South China Sea” [4] Reuters, 2022년 12월 3일, “Philippines needs to find ways to exploit South China Sea resources, says Marcos” [5] NIKKEI Asia, 2022년 11월 21일, “Harris meets Marcos as U.S. reaffirms Philippines security pledge” [6]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23년 1월 12일, “习近平同菲律宾总统马科斯举行会谈”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가스전 개발 선포…중국, 대형 해경함 파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와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1월 3일 남중국해 북나투나 해역(North Natuna Sea) 가스전을 개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인도네시아가 석유·가스 개발 활동을 위해 설립한 특별 기관인 SKK Migas는 2023년 1월 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총 30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북나투해 해역의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2017년 남중국해 남쪽에 있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북부를 북나투나해로 개명한 후 추진한 것이다. 당시 중국은 이러한 개명에 대해 반대하고, U자형의 '구단선'에 대한 주장을 지속했다.

1월 3일 인도네시아의 북나투해 가스전 개발이 발표되자 중국은 즉각 1만 톤 급 해경함을 파견해 견제 항행을 하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해경함은 12월 16일 하이난다오(海南島) 싼야(三亞)항을 떠나 30일 인도네시아 EEZ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림 6. 중국 1만 톤 급 5901호 해경함



그림 출처: 亞洲電視Asia Television

중국의 해경함이 인도네시아 EEZ에 진입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국제법 강사인 아리스티오 다르마완(Aristyo

아시아

중국

Darmawan)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경함이 인도네시아의 EEZ에 진입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라며,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탐사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이 문제를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림 7. 인도네시아 북나투해 가스전 개발 구역



그림 출처: Offshore Engineer

중국, 남중국해 문제 관련 아세안 분열 선호…인니·베트남 협력 우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베트남과 EEZ 중첩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는데, 당시에도 중국은 해경함을 파견해 순찰하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EEZ 획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2년 동안 EEZ 범위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번 협상으로 마침내 양국 간 영유권 분쟁 위험을 극복한 것이다. 이로써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EEZ 내 나투나 제도 인근 대륙붕인 투나 블록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 자국 보유 최대 해경함은 5901호를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해양안보 전문가인 쉬루이린(許瑞麟) 연구원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아세안 내부 분열을 선호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아세안 회원국 간 단결을 막으려고 하므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협상 체결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쉬 연구원은 중국이 해경함 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경계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아시아

중국

둘러싸고 양자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며, 미국 등 외부의 개입과 해당 문제의 '국제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은 9단선을 통해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해역을 자국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2009년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남중국해 '구단선' 주권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중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그림 8. 인도네시아 북나투해 가스전 개발 구역



그림 출처: NIKKEI Asia

출처 : [1] Reuters, 2023년 1월 2일, "Indonesia approves $3 bln development plan for South China Sea gas block" [2] NIKKEI Asia, 2022년 12월 23일, "Indonesia and Vietnam agree on EEZ boundaries in South China Sea" [3] Offshore Engineer, 2023년 1월 3일, "Indonesia Approves $3 Billion Development Plan for South China Sea Gas Block" [4] BBC中文, 2020년 1월 18일, "南海主權 : 中國與印尼為何在「納土納群島」海域發生爭執" [5] 亞洲電視Asia Television, 2023년 1월 13일, "中国最大海警船巡航　北纳图纳海争端再起？"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 욱

중국,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선박 구축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선박을 구축(驅逐)하고, 이 섬이 자국 영토인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경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중국 해경국(인민무장경찰대 해경총대)은 1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세마루호(新世丸) 등 일본 선박 5척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해에 불법 진입해 중국 영해에서 나갈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림 9. 중국 해경국 공식 홈페이지



그림 출처: 中国海警局(중국해경국)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영해이며, 법에 따라 관할해역에서 해상권 보호와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통해 "일본 측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해역에서 모든 위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카쿠열도는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군도로,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다.

출처 : [1] 中国海警局, 2023년 1월 30일, "中国海警依法驱离日非法进入我钓鱼岛领海船只"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개최

2023년 1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간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로 발표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에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하에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대한 합의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이 방위예산을 증액하기로 하고 방위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내용에 대해 미국은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하므로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공격에 대해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일본에 대한 방위를 재확인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센카쿠제도에 적용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사항은 양국간 확장억제대화(Extended Deterrence Dialogue)를 통해 보다 심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하 공동성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선 국제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외교 정책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위해 자국의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동맹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이원의 지역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양국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된 중국의 지속적이고 가속화하고 있는 핵무기 확장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공유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현대화, 동맹 파트너십의 확장, 동맹 태세의 최적화를 제안했다.

1. 동맹의 현대화

우선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1) 동맹의 조정, (2) 평시 양국의 노력, (3) 저지 및 대응을 위한 미일 동맹의 역량, (4) 우주, 사이버 및 정보보안, (5) 기술적 우위 유지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1) 동맹의 조정: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시기에 시기적절하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를 재차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일본에 상설공동본부(permanent joint

아시아

일본

headquarters) 설립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트너 국가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2) 평시 양국의 노력: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과 지역 불안정성을 저지하기 위한 평화시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국은 정보, 감시, 정찰(ISR)과 유연한 억지력 옵션을 포함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MQ-9 무인정찰기를 가노야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정보 공유를 늘리기 위해 양국 정보분석셀(Bilateral Information Analysis Cell, BIAC)을 개소한 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 시설의 공동 사용을 확대하고 일본의 남서 군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양국간 훈련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유사시 국방 자원의 회복력과 운용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장 및 항만의 유연한 사용에 대해 강조했다.

(3) 저지 및 대응을 위한 동맹의 역량: 양국이 최근 새로 발표한 전략 방향에 부합하도록 방어 관련 기능을 맞추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일본의 반격 능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유지, 해양, 상공,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영역을 교차하는 강화된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4) 우주, 사이버 및 정보 보안: 동맹의 한 분야로 우주 공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3년으로 예정된 일본의 우주상황파악 시스템(宇宙状況把握,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ystem, SSA)의 운영 이후 우주영역인식(Space Domain Awareness)에서 협업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주 역량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주에서부터 혹은 우주로의 공격을 미일동맹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보고 특정 상황에서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의 사이버 방어 자위대의 창설을 환영하고 정교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5) 기술적 우위의 유지: 기술개발은 동맹의 역량으로 직결되므로 동맹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분야 협력과 신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에 합의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 장비 공급망의 탄력성, 다양성, 안전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양국의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아시아

일본

2. 동맹 파트너십 확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관련하여, 한국, 호주, ASEAN, 태평양 도서국뿐만 아니라 NATO 및 EU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호주와의 관계에 대해, 미일 양측은 2022년 8월 미·일·호 3국 전략대화와 2022년 6월과 10월 3국 국방장관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서명한 일본-호주 안보 협력 공동선언에 따른 활동을 확대하여 호주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진전시킬 것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3국 인프라 파트너십 양해각서의 갱신을 환영했다.

한국과는 탄도미사일 방어, 해상 안보, 수색구조,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분야를 포함한 다자 및 3자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협력을 심화할 것을 제시했다.

ASEAN,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중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긍정적인 기여를 한 Qua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일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의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해 유사하면서 더욱 심각해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자 간 및 NATO와 EU를 통한 유럽-대서양 파트너 국가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이 NATO와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NATO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그룹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관점에서 2022년 6월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동맹 태세의 최적화

양국은 일본의 남서 제도를 포함하여 지역에서 증가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작전 개념과 강화된 능력을 바탕으로 동맹의 태세를 최적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주일미군의 전방 태세를 정보·감시·정찰·대함·수송 능력이 강화된 다목적·탄력적·기동적 전력을 배치해 동맹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상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12년 4월 27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조정한 미일 재배치 이행 로드맵은 제3해병사단사령부와 제12해병연대가 오키

아시아

일본

나와에 잔류하도록 조정된다. 2012년 재배치 계획의 기본 원칙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고 이러한 재조정이 오키나와 통합계획에서 반환될 예정인 토지 문제와 캠프 슈왑(Camp Shwab)의 후텐마 기지 대체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미일 동맹의 해상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요코하마 북쪽 부두에 복합 소형 양륙정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며 이는 곧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일본의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방안으로 주일미군이 최적화된 태세로 강화되어 동맹군의 억지력과 대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림 10.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사진



그림 출처: 外務省,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日米「2+2」)(概要)(2023년 1월 11일)

출처 : [1] 外務省, 2023년 1월 11일,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日米「2+2」)(概要) [2] U.S. Department of State, 2023년 1월 11일,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아시아

일본

전문연구원 김주형

2023년도 방위관계예산 구체화

2022년 12월 16일 각의 결정에서 「방위력 정비계획」이 확정되었다. 새 방위력 정비계획의 첫 예산으로 지금까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6조 6,001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27.4%에 해당하는 1조 4,213억엔 증액 계상되었다. SACO(오키나와 특별행정위원회), 미군 재편경비를 포함하면 6조 8,219억엔으로 전년 대비 1조 4,214억엔 높아졌다.

방위성의 장비 취득과 연구개발, 시설 정비 등 향후 다년간 진행할 방위력 정비 사업에 대한 신규계약액은 8조 9,525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5조 4,546억엔 확대되었다. SACO와 미국 재편을 포함한 신규 계약액은 9조 5,768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5조 5,054억엔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토마호크 도입, 개발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 양산, 화약고 건설 등의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방위력 정비계획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도 완료되었다. 관련 법령과 자금으로 가칭 '재원확보법', 가칭 '방위력 강화 자금'을 마련했다. 세출예산의 증액 재원은 세출개혁으로 2천억엔, 세외수입으로 1조 2천억엔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세외수입 등을 방위력 정비에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2023년 가칭 '재원확보법'에 근거해 새로운 자금제도인 가칭 '방위력 강화 자금'을 창설할 예정이다. '방위력 강화자금'은 재무대신이 관리하고,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도에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한 4.6조엔 정도의 세외 수입 중 위의 1조 2천억엔을 초과하는 3조 4억엔 정도를 '방위력 강화자금'으로 편입해 2024년도 이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비품 등 취득에 대해서는 계약 기준으로 3조 4,804억엔, 전년도 대비 2조 5,932억엔 증가하여 확보했다. 스탠드 오프 미사일(토마호크,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 등 포함)이나 통합방공비사일 방어능력(이지스 시스템 탐재함의 구성품 취득 등)과 같은 중점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고, 장갑차 26대를 신규 취득하는 등 기존 장비에 대한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신규 취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유지 정비에 대한 예산과 탄약 구입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중점 배분해 계약 기준으로 유지 정비는 2조 9,428억엔(전년도 대비 6,624억엔 증액),

아시아

일본

탄약 구입은 8,283억엔(전년도 대비 355억엔 증액)을 확보했다.

우주사이버·전자파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는 예산을 집중 배분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계약 기준 1,844억엔(전년도 대비 1,844억엔 증액)을 확보해 일본 최초 SDA(Space Domain Awareness, 우주영역인식) 용 위성 제작 비용과 여러 위성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방위성·자위대가 운용하는 시스템이 대상인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 기준 2,146억엔(전년도 대비 1,804억엔 증액)을 확보하고 장비품을 포함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상시 리스크 관리 체제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집약화, 장비 교체 등의 경비에 대한 계약에 3,522억엔(전년도 대비 2,052억엔 증액)을 확보했다.

방위 관련 연구개발에는 8,968억을 확보해 전년도 대비 6,056억엔 증가다. 향후 전쟁의 양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를 비롯한 신규 개발 사업과 발사 플랫폼 다양화와 함께 약 10종류의 스탠드 오프 미사일 연구개발 동시 추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약 10년 후의 시험 배치를 목표로 하는 레일건(Rail Gun, 화약 없이 전자력으로 탄환을 발사시키는 첨단 무기)과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무인기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경비를 계상했다. 그리고 향후, 기술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을 복적으로 다른 부처의 연구 성과를 방위 용도로 도입하기 위한 경비를 대폭 확충하고, 방위성 자체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공모·위탁하는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생산 기반 강화에서는 계약 기준으로 1,463억엔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1,431억엔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대대적으로 추가했음을 볼 수 있다. 방위 관련 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필요 경비까지 계상되었다.

인적 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자위관의 정원은 늘리지 않고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예산상 자위관 실원은 육상 자위대를 중심으로 1978년 이후 사상 최대 증원인 1,769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비행장, 항만, 화약고와 같은 자위대 인프라 정비 및 강화, 자위대 시설 내진화·노후화 대책 등을 위해 계약 기준 5,049억엔을 확보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서 평시부터 종합적인 방위체제 강화를 도모하기로 함에 따라 안전보장과 관련한 경비 전체에 대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상보안청 포함 각 부처에서 시설정비비와 선박건조비가 공채발행 대상 경비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위성·

아시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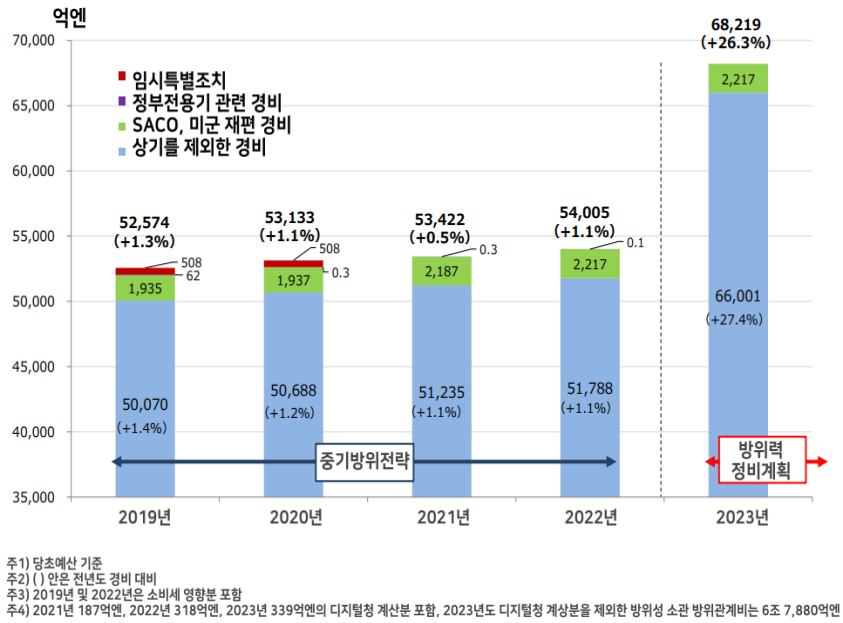
자위대의 시설정비비나 함선건조비에 대해서도 4,343억엔 규모의 건설공채 발행대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외무성에서는 동지국(일본과 법치 등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외교적 목적을 같이 하는 국가)의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하는데 지원하는 경비를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방위장비품 수출 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탄차와 연안 감시용 레이더 등을 공여한다. 외무성의 관련 예산은 7,560억엔이다. 동지국 안보 지원에는 20억엔을 할당한다. 일본은 그동안 정부개발원조(ODA)에서 비군사 분야에 한정해 동지국을 지원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ODA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동지국의 군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정보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SNS 공간의 감시에 약 2억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이나 정보 수집 경비로 1.4억엔을 계상한다. 그리고 그동안 주벨기에 일본대사관이 겸직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표부를 독립시키며, 재외공관 등 직원을 100명 증원할 방침을 명기했다.

그림 11. 일본 방위력 예산 추이(2019~2023년)



주1) 당초예산 기준
주2) ( ) 안은 전년도 경비 대비
주3) 2019년 및 2022년은 소비세 영향분 포함
주4) 2021년 187억엔, 2022년 318억엔, 2023년 339억엔의 디지털청 계산분 포함, 2023년도 디지털청 계상분을 제외한 방위성 소관 방위관계비는 6조 7,880억엔

그림 출처: 外務省, 「令和５年度防衛関係予算のポイント」

출처 : [1] 財務省, 2022년 12월 16일, 令和５年度防衛関係予算のポイント [2] 外務省, 2022년 12월 16일, 林外務大臣会見記録 [3] NIKKEI Asia, 2023년 1월 4일, 林外務大臣会見記録 [4] 産経新聞. 2022년 12월 19일, 外務省予算７５６０億円同志国「安保支援」明記

아시아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 서 희

아융인에 대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중국,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은 아융인(Ayungin)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융인은 스프래틀리 군도 내 사주로 약 35개의 소도, 사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1]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또한, 스프래틀리 군도는 이 지역의 중요한 해상 항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필리핀,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아융인에 대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12. 남중국해 주변국 영유권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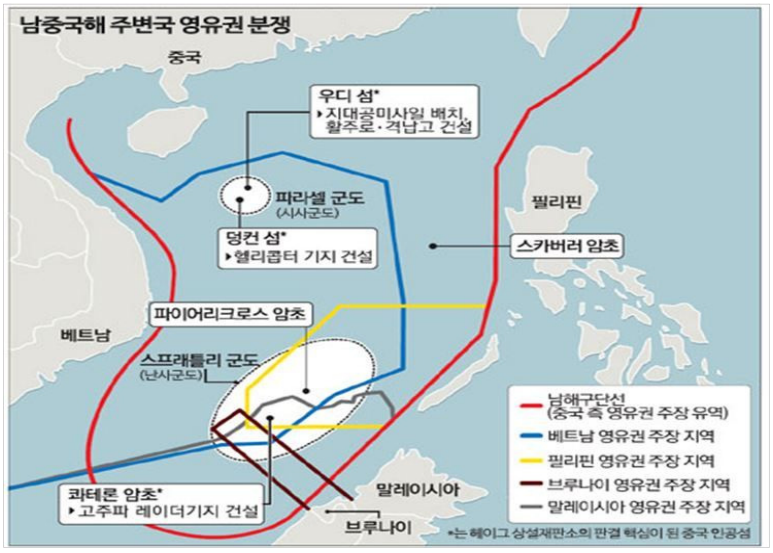


그림 출처: 매경 프리미엄

분쟁의 배경

1995년 8월, "남중국해 현안에 관한 필리핀-중국 양자 회담(Philippines-china Bilateral Consultations on the South China Sea Issue)"이 개최된 이후, 필리핀과 중국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권리에 관한 분쟁해결, 해당 해역 내 항해 및 생물자원·무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 행사, 스프래틀리 군도 및 스카보로 암초에 대한 지위 협상 타결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에

1)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의 넓이는 약 15,000㎢이다.

아시아

필리핀

도 양국은 수차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였다.

2011년 3월 2일, 스프래틀리 군도 "The Reed Bank"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필리핀 과학조사선이 이 해역에서 해저가스를 탐사하고 있을 때, 중국 경비정은 필리핀 과학조사선에 탐사활동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필리핀은 전투기와 경비정을 급파하였다. 2011년 5월, 필리핀은 이 지역에 공군기지를 구축하고, 관측비행기 및 호위군함을 증강하였다. 2011년 7월 20일, 필리핀은 분쟁해역 일부 도서에 정수시설과 냉장시설을 설치하고, 부두, 방파제 및 활주로를 건설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은 이 지역 인근에서 조업을 지속하였다. 2012년 4월 11일, 필리핀 군함이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를 시도하였고, 양 국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양 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과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치적인 시도를 감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필리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제7부속서에 따라 2013년 1월 22일 외교서한을 통하여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내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중재재판소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19일 중국은 필리핀에 중재회부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공한을 송부하고, 중재관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소장에 중재관 선임을 요청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3조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소장은 중국 측 중재관 1인과 이외 중재관들을 선임함으로써 5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를 구성하였다.

필리핀 주장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재재판소 청구취지에서 구단선에 따른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인지 여부,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양관할권 행사에 관한 중국의 방해행위가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 유엔해양법협약상 스프래틀리 군도에 위치한 여러 수중 지형들의 법적지위가 무엇인지를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22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필리핀의 공식입장이 잘 나타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필리핀은 첫째, 중국이 9단선 내 해역에 대한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주장해왔고, 이 해역에서 필리핀의 권리 행사를 간섭하였다. 둘째, 9단선 내 해역에 산재한 도서들 대부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섬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필리

아시아
필리핀

핀 영토의 수중 모래톱, 암초, 간출지 및 산호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필리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넷째, 2012년 6월, 중국은 9단선 내 해역을 하이난성(Province of Hainan)의 관할 아래에 두고 이 해역을 관리하는 새로운 행정기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였다. 필리핀은 이와 같은 이유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국 주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중국을 중재재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9단선을 근거로 한 중국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는 것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생물자원을 개발하는 필리핀 선박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의 생물 및 무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필리핀은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필리핀의 항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주장

중국은 고대시대부터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구단선 내 해역 및 해저지형에 관한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2009년 5월 7일, 중국은 처음으로 유엔사무총장에 보낸 서신에서 남해구단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 대부분을 자국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구단선 내 존재하는 모든 해역, 해저 및 모든 산호초 등에 자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선포하고, 1996년 중국 직선기선의 선포에 관한 선언, 1998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등을 통해 해양관할권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령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필리핀이 중재재판을 제기한 2013년부터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과 같이 작은 이웃국가들의 영토를 잠식하면서도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역사적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중국은 다른 분쟁지역으로 매립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수중 지형을 다층건물과 활주로가 있는 인공섬으로 변형시켰으며,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융인 인근 해역 중국해안경비대의 필리핀 선박 격추 사건

최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은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수중지형을 점유하였고, 이 지형에 시설물을 건설하고 간척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

아시아

필리핀

해양지형에 대한 중국이 간척사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23년 1월 9일, 필리핀 해경은 중국해안경비대(Chinese coast guard vessel, CCGV)가 아융인 인근 해역에서 어업 중이었던 필리핀 어선 켄켄 보트와 선장 리토 알오스(Lito Al-os)를 비롯한 어민을 격추했다고 신고하였다. 1월 20일, 리토 알오스 선장은 중국해안경비대 5204호가 켄켄 보트를 격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필리핀 해안경비대(Philippine Coast Guard, PCG)에 보고하였으며, 1월 21일, PCG는 중국해안경비대 선박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24일, 필리핀 외교부는 국제법에 따라 필리핀 어민이 아융인에서 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 행위에 대한 외교적 항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 외교부는 아융인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자 대륙붕의 일부라고 하면서 "필리핀은 타국의 간섭없이 이 지역에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President Ferdinand "Bongbong" Marcos)이 지난 1월 3~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필리핀 국방부는 필리핀 어부들을 이 지역에서 강제로 쫓아냈던 CCG의 조치에 대해 군과 법 집행 기관의 공식적인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16년 중재재판소 판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타국의 간섭 없이 아융인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필리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출처 : [1] PHILIPPINES-CHINA RELATIONS, 2023년 1월 21일, "Chinese coast guard shooed away PH fishing boat from Ayungin Shoal - PCG" [2] The Print, 2023년 1월 25일, "Philippines reiterates Filipino fishermen's rights in Ayungin to China" [3] ANI, "Philippines reiterates Filipino fishermen's rights in Ayungin to China" [4] Radio Free Asia, 2023년 1월 24일, "Philippines 'vigilantly' monitoring alleged harassment by China in disputed waters"

북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김 소 연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 워크숍 첫 개최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의 파트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IUU)와 해양영역인식(MDA)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 PBP 출범 이후 열린 9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것과 달리 PBP의 초기 출범 국가들과 같이 '파트너' 국가 지위로서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파트너 국가들은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IUU와 MDA와 관련된 도전 과제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향후 협력 분야를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PBP는 본래 미국이 지난 2022년 6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경제 ·외교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비공식협력체이다. 하지만 미국은 PBP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견제 포석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 대응, 불법어업 근절, 개발협력 등과 관련하여 태평양 도서국들을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중국 역시 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하며 다양한 분야 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미중간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강화 및 견제 영향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푸른 태평양 동반자 워크숍 개최



그림 출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Daniel K. Inouye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023년 1월 24-26일)

북아메리카

미국

한편 지난 2월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략적 연계: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전략 자원 조달(Strategic Alignment: The Imperative of Resourcing the Indo-Pacific Strateg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후 1년만에 발표된 것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와 함께 PBP의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PBP 구상에 한국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한다며 한국의 QUAD 참여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 간의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위원회(U.S.-Japan Economic Policy Consultative Committee, EPCC)에 한국도 참여하는 형태를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영향력을 확대와 함께 대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미일 간 공조 역시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U.S. Department of State, 2023년 1월 27일, "Strengthening Shared Understanding Among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and Pacific Islands: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F) and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유럽

노르웨이

전문연구원 김 지 혜

노르웨이, 최다 북극 석유가스 탐사 라이센스 계약 계획

노르웨이 정부가 최근 2022년도 APA(Awards in Predefined Areas)[2]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대륙붕에서 47개 신규 생산 라이센스[3]를 25개 기업에게 제공한데 이어 2023년에는 노르웨이해와 바란츠해에서 총 92개 신규 APA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4].

그림 14. 새로 제안된 바렌츠해 탐사광구(분홍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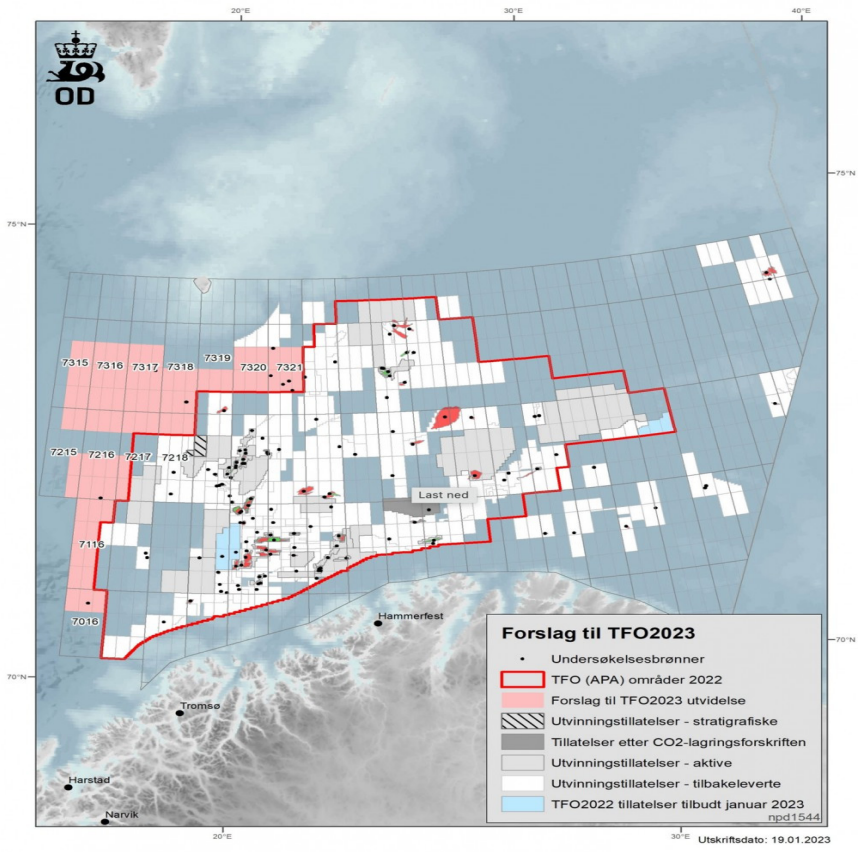


그림 출처: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2) APA는 노르웨이 대륙붕의 성숙 유전지대에 생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연례입찰 제도임
3) 북해 29개, 노르웨이해 16개, 북극바렌츠해 2개
4) 노르웨이해 14개, 바렌츠해 78개

유럽

노르웨이

노르웨이 석유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유전을 발견하는 것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여파로 지난해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자는 기존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최근 천연가스 수출로부터 기록적인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노르웨이석유국의 2022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수익이 2020년 369억 유로에서 2022년 1,662억 유로로 약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도 석유 및 가스 생산과 신규 탐사 계획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해 환경 보호론자들은 노르웨이 정부의 이중성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림 15. 2012-2022년 노르웨이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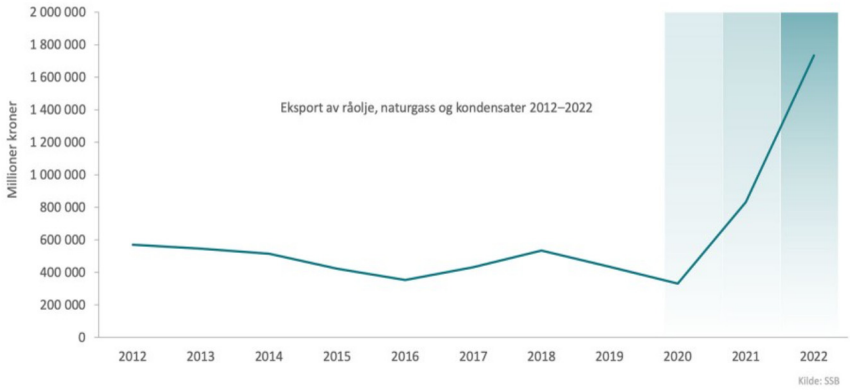


그림 출처: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Statistics Norway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효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여 2030년에는 기후중립국을 이루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에는 약 1조 달러 기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연기금을 석유와 가스로 수익 창출 또는 환경에 유해한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이처럼 노르웨이는 친환경적인 국가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2%가 노르웨이에서 기인하며, 하루 생산량 기준 약 17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세계 15위의 석유 생산국이다. 2020년 수출액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부문이 기여한 비중은 47%이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번 2023년도 APA 계획 발표에 대해 새로 추가되는 대부분의 APA 구역이 생태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바렌츠 해 북부 끝쪽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럽

노르웨이

출처 : [1] Arctic Today, 2023sus 1월 25일, “Norway plans to offer record number of Arctic oil, gas exploration blocks” [2] The Barents Observer, 2023년 1월 25일, “Norway’s oil minister: ”We need new discoveries“ [3] IMPACT ON, 2021년 1월 5일, ”노르웨이 “북극 석유 탐사 중단하라”는 그린피스 소송 4년째, 결과는?“ [4] S&P Global, 2023년 1월 24일, ”Norway plans to include more Barents Sea, Norwegian Sea blocks in new APA round“

호주

호주

전문연구원 민영훈

제2차 호주-프랑스 외교·국방장관 회의

2030년 1월 30일 제2차 호주-프랑스 외교·국방장관 협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체는 2022년 7월 1일 호주 총리 안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와 프랑스 대통령 엠마뉴엘 마크롱이 양국 관계의 복원을 희망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기후변화 협력, 해양안보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태평양에서의 협력

호주와 프랑스는 기후변화와 태평양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 또한 합의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 양국은 파리협정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온도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G20 국가들을 촉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합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기후변화기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탄소제로, 기후 회복 글로벌 경제(climate-resilient global economy)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하기로 양국은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기후변화기금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기금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2026년 호주가 제31차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COP31)를 개최하기 위한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양국은 2025년 태평양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쿤밍-몬트리얼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제(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이행하고 2025년까지 국제 생물 다양성에 관한 재정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호주와 프랑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해 기후변화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태평양의 키와 이니셔티브(Kiwa Initiative)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사정에 중점을 두고 포괄적 국제 해양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장려하는 2025년 유엔해양회의를 프랑스가 코스타리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호주

호주

개방적인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양국은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망 안보, 해양안보 및 안전, 기후변화, IUU어업퇴치, 블루 이코노미 촉진 등에 대해 협력하기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정책(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지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성, 투명성, 주권, 국제법 원칙 확보를 강조하고, 아세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는 해양협력, 연결성, 유엔 SDG 2030, 경제협력에 맞추어 지역 중심 협력체인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국은 자유로운 남중국해를 강조하며, 남중국해가 군사화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했다. 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양안이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대화로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였다. 반면, 양국은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경제, 과학, 무역, 기술 문화에서 관계를 심화하기로 밝혔다.

그림 16. 호주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그림 출처: Reuter(2023.1.29.), Senior Australian ministers to visit France, Britain to boost ties(검색일: 2023.2.25.)

국방 및 안보, 기후변화,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양자 협력

양국은 양국간 협력의 축을 국방과 안보, 기후변화, 교육 및 문화로 정의하고, 가능한한 근시일내 협력에 관한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안보와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공동 이익을 위해 물자 운송

호주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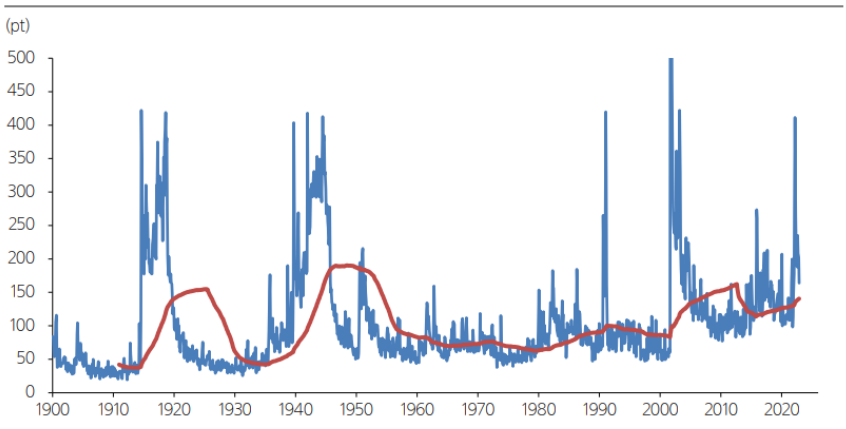
및 작전 수행에 있어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각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군사 훈련에 양국이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후 분석과 재난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관측을 포함한 민간 우주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호주-EU 무역 협정 협상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양국이 함께 표했다.

국제 안보를 위한 협력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이란, 북한, 탈레반, 우크라이나, 미얀마 지역 안보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 시위 참가자들의 사형과 처형에 대해 이란 당국의 기본권과 자유권 침해를 비난하였으며, 이란 정부의 핵무기 무장 등이 걸프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위협을 됨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급에 대응하기로 발표하였다.

북한과 관련하여서 양국은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탈레반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정부기구 근무 금지, 여성의 대학 및 중등 교육 배제 등과 관련한 여성 및 소녀의 자유와 인권 침해에 대해 비난 하였다. 양국은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탄약 지원 등 지속적인 물자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미얀마 군부 집권에 대해서는 정치범 석방 자유로운 인도주의가 이루어지도록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림 17. 추세적으로 상승 중인 전 세계 지정학 위험 지수



참고: 적색선은 10년 이동평균
자료: Matteoiacoviello.com, 삼성증권

그림 출처: 유승민(2022), 2023년 7대 지정학위험, 삼성증권 지정학분석팀

호주

호주

호주-프랑스 외교·국방장관 회의의 함의

호주-프랑스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의는 원거리에 있는 타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내 의제를 리드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역내 정책에 대한 역외 국가의 지지라는 또 다른 동의가 지역내 자국 의제를 견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불안정성이 가증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내 중견국인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프랑스는 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걸프지역, 중동지역에서의 안보, 지역경제, 자원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국을 지렛대로 양국 주변국들과의 협력 또한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중추국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호주-프랑스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대만해협 분쟁,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지역내 의제를 주도하고 글로벌 문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자간협력과 더불어 최우방국과의 양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 확대가 문제의 현상에 따른 결과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나라와 협력국과의 공통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이익을 전략적으로 분석 및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1] Minster for Foreign Affairs, 2023년 1월 30일, Second France-Australia Foreign and Defence Ministerial Consultations [2] Reuters, 2023년 1월 29일, Senior Australia ministers to visit France, Britain to boost ties [3]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2021년 8월 30일, Inaugural Australia-France 2+2 Ministerial Consultations [4] 유승민, 2022년 12월 26일, 2023년 7대 지정학위험, 삼성증권 지정학분석팀

중동
리비아

연구원 김 민

리비아 법원, 튀르키예와의 탄화수소 자원 탐사 합의 무효 판결

1월 9일 리비아 법원은 2022년 리비아 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 GNU)와 튀르키예 간 탄화수소 자원 에너지 탐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rkiye and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State of Libiya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ydrocarbons)의 효력을 중단(suspend)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해당 합의를 주도했던 리비아 통합정부는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에게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는 여전히 이 합의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not to take seriously)"을 전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리비아 통합정부가 터키 국영기업(Türkiye Petrolleri Anonim Ortaklığı, TPAO)이 장기간 리비아 탄화수소자원의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문제가 된다.

※ 리비아는 오랜 내전 후 서부 트리폴리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정부(GNU)와 이에 대치하는 동부 토브룩 기반 알타니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비아는 유엔의 도움을 받아 2021년 12월 24일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가 계획이 예정되었으나 내전으로 인해 계속 실시되지 못하였다.

유엔 주도의 리비아 혼란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인 "2020 포괄적 해결 준비단계 로드맵" 제10조에서는 "과도적 통합정부가 리비아 국가의 외교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방식으로 장기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또는 이전의 협정이나 결정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리비아와 튀르키예간 합의는 리비아에 장기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로드맵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따라 리비아 통합정부에 반대하는 동부 알타니 내각은 해당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리비아 하원 의장은 "국민통합정부의 권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밝히며, 이 합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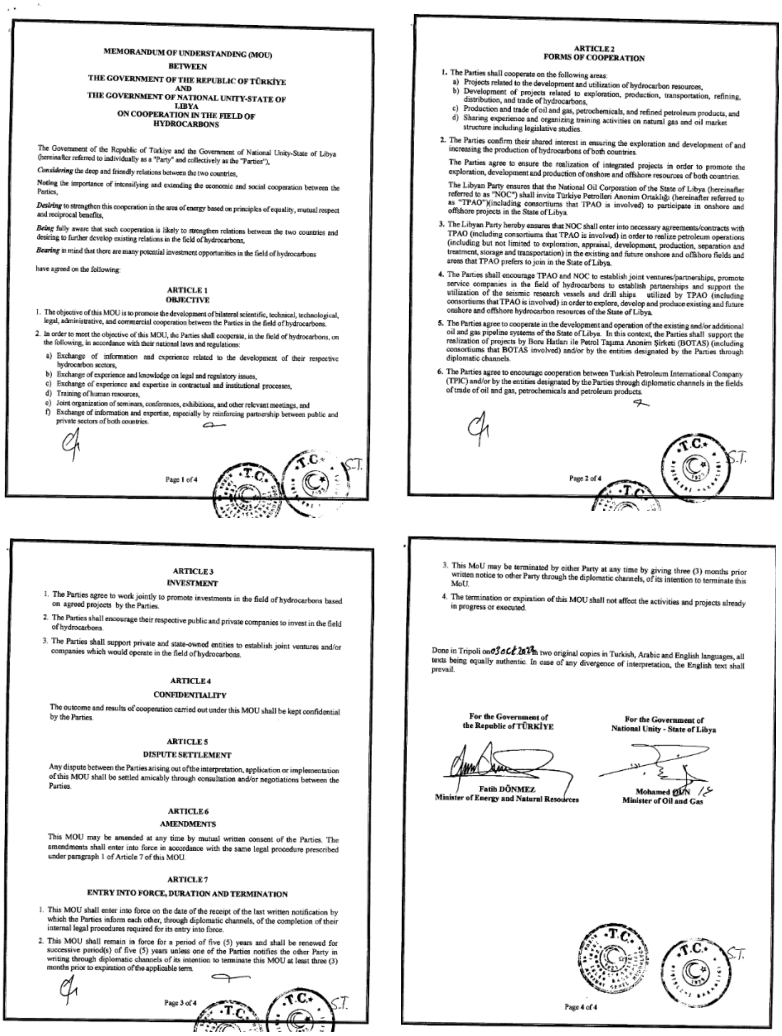
또 다른 문제는 해당 합의가 이집트와 그리스와의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을 포함한 2019년 터키와 리비아 간 체결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양해

중동
리비아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ment of the Republic of Turkey and The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State of Libya on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Jurisdiction Areas in the Mediterranean)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리비아가 위치한 동지중해는 탄화수소 자원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수역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동지중해에서 튀르키예와 리비아는 2022년 탄화수소 자원 탐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해당 합의 채택 당시 유럽 국가를 포함한 동지중해 주변국들은 일제히 리비아 국민통합정부와 튀르키예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국민통합정부는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터키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 18. 2022년 리비아와 튀르키예간 탄화수소 자원탐사에 관한 양해각서 원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ÜRKİYE
AND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STATE OF LIBYA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ürkiye and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State of Libya (hereinafter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Considering the deep and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Noting the importance of intensifying and extend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is cooperation in the area of energy based on principles of equality, mutual respect and reciprocal benefits,

Being fully aware that such cooperation is likely to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desiring to further develop existing relations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Bearing in mind that there are many potential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ARTICLE 1
OBJECTIVE

1. The objective of this MOU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scientific, technical, technological, legal, administrative, and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2. In order to meet the objective of this MOU,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on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hydrocarbon sectors,
   b) Exchange of experience and knowledge on legal and regulatory issues,
   c) Exchange of experience and expertise in contractual and institutional processes,
   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e) Joint organization of seminars, conferences, exhibitions, and other relevant meetings, and
   f)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ise, especially by reinforcing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both countries.

Page 1 of 4

ARTICLE 2
FORMS OF COOPERATION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on the following areas:
   a) Projec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hydrocarbon resources,
   b) Development of projects related to exploration, production, transportation, refining, distribution, and trade of hydrocarbons,
   c) Production and trade of oil and gas, petrochemical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d) Sharing experience and organizing training activities on natural gas and oil market structure including legislative studies.
2.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interest in ensuring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and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hydrocarbons of both countries.
   The Parties agree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integrated projects in order to promote the explor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onshore and offshore resources of both countries.
   The Libyan Party ensures that the National Oil Corporation of the State of Lib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C") shall invite Türkiye Petrolleri Anonim Ortaklığı (hereinafter referred to as "TPAO")(including consortiums that TPAO is involved) to participate in onshore and offshore projects in the State of Libya.
3. The Libyan Party hereby ensures that NOC shall enter into necessary agreements/contracts with TPAO (including consortiums that TPAO is involved) in order to realize petroleum oper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xploration, appraisal, development, production, separation and treatment, storage and transportation) in the existing and future onshore and offshore fields and areas that TPAO prefers to join in the State of Libya.
4.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PAO and NOC to establish joint ventures/partnerships, promote service companies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to establish partnerships and support the utilization of the seismic research vessels and drill ships utilized by TPAO (including consortiums that TPAO is involved) in order to explore, develop and produce existing and future onshore and offshore hydrocarbon resources of the State of Libya.
5.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existing and/or additional oil and gas pipeline systems of the State of Libya. In this context, the Parties shall support the realization of projects by Boru Hatları ile Petrol Taşıma Anonim Şirketi (BOTAS) (including consortiums that BOTAS involved) and/or by the entities design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6. The Parties agree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Turkish Petroleum International Company (TPIC) and/or by the entities design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the fields of trade of oil and gas, petrochemicals and petroleum products.

Page 2 of 4

ARTICLE 3
INVESTMENT

1. The Parties agree to work jointly to promote investments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based on agreed projects by the Parties.
2.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ir respective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to invest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3. The Parties shall support private and state-owned entities to establish joint ventures and/or companies which would operate in the field of hydrocarbons.

ARTICLE 4
CONFIDENTIALITY

The outcome and results of cooperation carried out under this MOU shall be kept confidential by the Parties.

ARTICLE 5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MOU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consultation and/or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6
AMENDMENTS

This MOU may be amended at any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egal procedure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is MOU.

ARTICLE 7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MOU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y which the Parties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required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MOU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and shall be renewed for successive period(s) of five (5) years unless one of the Parties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MOU at least three (3) months prior to expiration of the applicable term.

Page 3 of 4

3. This MoU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any time by giving three (3) months prior written notice to other Part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MoU.
4.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MOU shall not affect the activities and projects already in progress or executed.

Done in Tripoli on 03 Oct 2022 in two original copies in Turkish,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ÜRKİYE
Fatih DÖNMEZ
Minister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For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 State of Libya
Mohamed OUN
Minister of Oil and Gas

Page 4 of 4

그림 출처: 유엔 조약 시스템

중동
리비아

출처 : [1] Nordic Monitor, 2023년 1월 26일, “Turkey presses further on putting controversial oil and gas deal with Libya into force”, https://nordicmonitor.com/2023/01/turkey-presses-further-on-putting-controversial-oil-gas-deal-with-libya-in-action/ [2] Middle East Eye, 2023년 1월 25일, “Libya-Turkey energy deal 'valid' despite court ruling, oil minister says” https://www.middleeasteye.net/news/libya-turkey-energy-deal-valid-despite-court-ruling-oil-minister-tells-mee [3] The Libya Update, 2023년 1월 12일, “Turkey says Tripoli government backs energy deal despite court suspension”, https://libyaupdate.com/turkey-says-tripoli-government-backs-energy-deal-despite-court-suspension/ [4] DailySabah, 2023년 1월 11일, “Libyan court suspends maritime deal with Türkiye”,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diplomacy/libyan-court-suspends-maritime-deal-with-turkiye [5] Reuters, 2023년 1월 10일, “Libyan court suspends energy deal with Turkey”,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libyan-court-suspends-energy-deal-with-turkey-2023-01-10/ [6] Al-Monitor, 2022년 10월 3일, “Turkey and Libya sign maritime hydrocarbons deal”, https://www.al-monitor.com/originals/2022/10/turkey-and-libya-sign-maritime-hydrocarbons-deal

3개월 내 행사계획

국제법평론회 동계학술대회-Junior Scholar's Workshop

12월 17일(토)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403호

- **주최** 국제법평론회
- **공동주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요 내용** 국제법의 새로운 쟁점 및 과제

The 10th 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

12월 15일(목)-16일(금) / 서울 K호텔

-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원**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 **주요 내용** Session 1: Exercise of Jurisdiction in the Area of Overlapping Maritime Claims
  Session 2.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Session 3. Sea Level Rise and UNCLOS
  Session 3. Sea Level Rise and UNCLOS
  Young Scholar's Agora: Challenges to the UNCLOS and Capacity Building

한국해양수산개발원-영토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11월 11일(금) / 프레스 센터

-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영토학회
- **주요 내용** 1.맥아더 사령부의 독도 정책 검토(현대송 박사)
  2.시볼트의 영토 인식(송휘영 교수)
  3.딘 러스크 메모의 검증 (이성환 교수)
  4.한일 국경선을 표시한 고지도 연구(이문수 교수)
  5.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조치(최장근 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10월 27일(목)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3층)

-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비교사연구센터
- **주관** (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3개월 내 행사계획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자대회

10월 21일(금) ~ 22일 (토)/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 **주관** 대한국제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상북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성균과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법평론회, 국제해양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주요 내용** 국제질서의 동향과 국제법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3차)

10 월 31(월) ~ 11월 11일 (금) / 자메이카 킹스톤 ISA 본부

- **주요 내용** ISA 예산, 심해저 개발에 관한 규칙 승인, 심해저 개발 계약자 활동 검토, 법률기술위원회 보고서 논의 등

ITLOS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 역량강화 프로그램

2022년 7월 ~ 2023년 3월 / 독일 함부르크 ITLOS

ITLOS – Nippon Foundation Capacity-Building and Training Programme on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해양환경, 해양경계획정 등 해양법 관련 내용 및 분쟁해결절차를 다루며, 강의, 실습, 연구, 현장 방문 등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
  - 자격: 해양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개도국 출신 중간 관리직 공무원이나 연구원
  - 기간: 9개월